



제30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6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12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부 분묘의 봉안시설, 자연장지 전환·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봉안시설의 설치장소) 거리제한 규정 적용 예외사항 정비
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타목나)③에 해당하는 경우
 -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(문중)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
- 법 제명 인용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관련부서 : 노인복지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12. 14. ~ 2024. 1. 3.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 제2항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3호타목나)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에 법 제명 인용 현행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

- 검토결과 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인 ‘가족·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·설치’하는 경우에는 봉안시설 설치장소의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으로써 「개발제한구역법」과 동 조례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고하며 봉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15조(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(이하 “사설화장시설”이라 한다) 또는 봉안시설(이하 “사설봉안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9. 4. 23.>
-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-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23.>
-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·관리하려는 자는 「민법」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·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·관리하는 경우이거나 「민법」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·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4. 23.>
-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8., 2019. 4. 23.>
-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, 설치장소,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8., 2019. 4. 23.>

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18조(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,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5. 7. 20., 2020. 1. 7.>
- ② 삭제 <2015. 7. 20.>

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관련내용 발췌

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5.7.20.>

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(생략)

2. 사설방안시설

가. 방안묘

1) 개인 또는 가족방안묘

가) 개인 또는 가족방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, 그 면적은 개인방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, 가족방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

나) 개인 또는 가족방안묘는 사원·묘지·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(생략)

2) 종중 또는 문중방안묘

가) 종중 또는 문중방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,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

나) 종중 또는 문중방안묘는 사원·묘지·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☑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(이하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이라 한다)의 시행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6., 2010. 4. 15., 2011. 4. 14., 2011. 9. 16., 2013. 5. 28., 2014. 1. 28., 2015. 12. 29., 2019. 8. 20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

가. 공원, 녹지, 실외체육시설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

나. 도로,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(線形)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

다.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

라. 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

마.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·생업을 위한 시설

☑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제13조(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표 1] 관련내용 발췌

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5. 7.>

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
1.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(생 략)	
2. 개발제한구역을 통과 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(생 략)	가)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. 나)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.
3.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(생 략)	해당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,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.
타. 장사 관련 시설	가)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(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, 그 안에 봉안시설,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. 나) 가)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

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
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·설치하는 경우

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(존속 중인 건축물 및 제 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부지로 한정한다)에 설치하는 경우

③ 가족·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(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)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·설치하는 경우

④ 자연장지를 사찰 소유의 건물·죽목 및 그 밖의 지상물(地上物)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[불교 의식(儀式), 승려의 수행·생활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한정한다]나 이와 연결된 부속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

다) 나)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전환·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·녹지 등 자연친화적인 부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[별표1]제3호타목나)③에 따라 “가족·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로 전환·설치하는 경우”에 봉안시설 설치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한혜정